

“내저가입찰, 도 건설사 진입 막아”

도내 아파트 건설공사비용
기초가격보다 20% 낮게 유도
타지역 대규모 건설사만 참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수백억원대의 강원지역 아파트 건설공사 비용을 기초가격보다 20% 이상 낮게 저가낙찰을 유도, 도 건설사들의 진입 장벽을 높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LH와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도내에서 추진한 공사가격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는 모두 3건이다. 기초공사가격이 404억여원인 '춘천우두-A-2BL 및 화천신읍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550억여원인 '원주흥업 B-1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170억여원인 '원주태장 B-1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에 대한 사업이다.

이 가운데 원주 태장동을 제외한 도내 대규모 주택건설공사가 기초가격보다 20% 이상 낮게 추진됐다. 춘천 우두동과 화천신읍 아파트 건설공사는 투찰 1순위사의 입찰금액이 323억여원

2018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 아파트 건설공사(50억원 이상)

	기초공사가격	1순위투찰가격	투찰율
춘천 우두 A-2BL 및 화천신읍 3공구	404억여원	323억여원	79.9%
원주 흥업 B-1BL 2공구	550억여원	397억여원	72.3%
원주 태장 B-1BL 2공구	170억여원	136억여원	80.1%

출처/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으로 기초공사가격보다 20.4%, 원주 흥업면 아파트 건설공사는 기초공사가격보다 27.6% 낮은 397억여원에 공사가격이 각각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공사 모두 저가로 추진되면서 도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가 저조, 결국 타 지역 업체가 수주했다. 도내 50억 원대 이상 대규모 공사가 가능한 건설사는 지난해 말 기준 80여곳이지만, 이 2건의 공사 입찰에 나선 도내 건설사는 1곳에 불과했다. 춘천 우두동과 화천신읍 아파트 건설공사에 입찰한 도내 건설사는 전국 23개사 중 1개사도 없었으며 원주 흥업면 공사도 전국 입찰참가 44개사 중 도내 건설사는 원주 요진건설 산업 1곳뿐이었다.

원주 태장동 아파트 건설공사만 기초가격보다 19.9% 낮은 136억 원에 추진하게 돼 도내 6개 건설사가 참여, 정선 흥리종합건설이 공사를 수주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LH의 주택건설공사 대부분 무리한 저가 공사비용을 요구하면서 수주난을 겪는 도내 건설사들마저 채산성이 맞지 않아 외면하는 실정이다”며 “저가공사는 위험부담에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타시·도 대규모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강원본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공사비 정상화 요구에 최저가 입찰기조가 사라지는 추세다”고 밝혔다. 신관호 gwanho@kado.net

5월 산업재해 사망사고 4건 발생

노동부 강원지청 감독 강화

지난달 도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사고 4건이 발생하자 당국이 현장 감독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울릉어관급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산업현장에서 4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4일 흥천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발주로 국도 확장 공사 중 근로자 1명이 굴삭기 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으며 17일 인제에서는 한국전력 발주로 전기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관할 지역과 원주지청 관할 지역에서도 각각 1건의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있었다.

올해 1~4월까지 강원지역 중대재해는 5건에 그쳤으나 지난달에만 4건이 추가 발생하자 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달 도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추락재해 예방 일제감독을 실시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공사 밀집 지역에서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송재준 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본부장은 “도내 관급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며 “안전 관리에 대한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소담

4월 건설수주 '맑음'

올해 전년동월대비 첫 증가

4793억원, 민간수주액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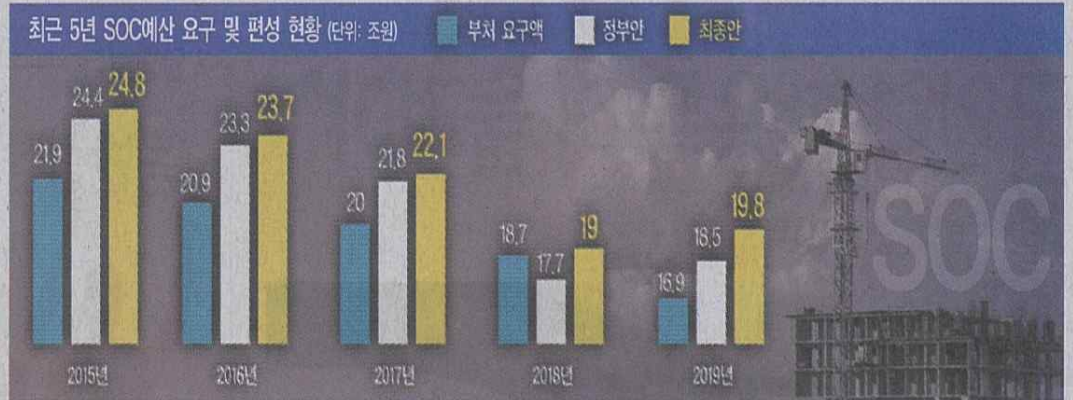
지난 4월 강원 건설수주액이 올해들어 첫 증가세로 돌아섰다. 2일 강원통계지청의 '4월 강원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내 건설수주액은 4793억여원으로 전년동월(3313억여원)보다 1480억여원 늘면서 44.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들어 첫 전년동월대비 수주액이 증가한 것이며 연중 최대 수주액이다.

특히 민간분야 건설수주액이 비교적 크게 늘었다. 지난 4월 도내 민간부문 건설수주액은 4229억여원으로 전년동월(2780억여원)보다 1448억여원 늘면서 52.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동기간 도내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은 288억여원에서 387억여원으로 99억여원 늘면서 34.3%의 증가율을 기록, 민간건설분야가 도 건설수주액 증가를 주도했다. 신관호

내년 SOC예산 요구액, 5년만에 반등 유력

2015년 21.9兆서 올 16.9兆로 '뚝' 에타면제 등 따른 신규사업 증가로 정부부처 요구액 최소 18兆 이상 정부안은 1兆 이상 증액될 듯



정부 각 부처가 지자체 요구를 취합해 재정당국에 제출하는 내년도 SOC 예산(안) 요구액이 5년 만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편성하는 SOC 예산안도 올해 보다는 최소 1조원 이상 증액이 예상되며 2021년부터는 확실한 반등 곡선을 그릴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지출분야별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요구서는 지난 3월 기재부가 통보한 예산 및 기금편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지자체 등의 요구를 취합해 작성한다. 이는 내년도 지출분야별 예산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서, 재정당국은 이를 토대로 오는 8월 말 국회에 제출할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다.

12대 정부 지출분야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SOC(사회기반시설)다. 500조 원이 넘는 '초수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수년간 감축 기조를 이어왔던 SOC 예산이 내년에 증액될 지가 관심사다.

지난 5년간 SOC 예산 요구액을 보면, 유례없는 감소세를 이어왔다.

2015년 21조9000억원 달했던 요구액은 이듬해 20조9000억원으로 줄었고 2017년에도 20조원에 턱걸이했다. 2018년에는 18조7000억원으로 더 줄었고 올해에는 16조9000억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국내 인프라스트럭처가 충분하다는 정부의 인식이 예산 편성지침에 반영돼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했기 때문이다.

기초자료인 요구액이 이처럼 급감하면서, 재정당국이 편성하는 정부안도 가파른 내리막길을 탔다.

2015년 24조4000억원에 달했던 정부의 SOC 예산안(국회 의결 전)은 이듬해 23조3000억원으로 줄었고 2017년에도 21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또 2018년 문 정부의 첫 예산안은 17조7000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나마 투자부진 우려가 확산하면서 올 정부안은 18조5000억원으로 소폭 늘었으나, 큰 틀에서의 삭감 기조에는 변함

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변화가 예상된다.

24조1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에타) 면제조치와 더불어 도시재생 등 생활 SOC 및 노후 SOC 보수·보강사업이 확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SOC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부는 내년 SOC 예산안을 재정당국이 취합, 확정하겠지만 예년과 달리 올해는 일정 수준 이상 증액을 기대할 만하다고 귀띔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2018년도 SOC 예산과 관련해 “기존에 추진했던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SOC 예산이 크게 줄었으나, 2020년부터는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요구액 기준으로 적어도 1조원 이상의 증액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몇 년 동안은 재정당국이 반영해줄 만한 신규사업이

부족했고 각 부처도 이를 억제해왔지만, 올해부터는 SOC 정책기조가 달라져 증액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재정당국이 부처 요구액을 발표하겠지만, SOC 요구액은 최소 18조원 이상, 정부안은 20조~21조원 내외, 국회 확정안은 21조원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SOC 예산 증가세는 2021년에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에타 면제사업을 비롯해 수도권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대형사업은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예산 반영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확실한 투자기조 변화를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정부터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재정운용계획(지난해 기준) 상 SOC 예산은 앞으로 5년간 매년 평균 2%씩 감축이 예정돼 있다.

건설기성 15개월연속 하락세... 4월 '-5.6%' (전년 대비)

건설경기를 나타내는 4월 건설기성(불만)이 전년 동기 대비 -5.6%를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하락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건설기성은 9조 15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4월 9조 6979억원보다 5.6% 감소한 수치다. 전월과 비교해도 2.8% 줄었다.

건설기성은 지난 2018년 2월 -2.7%를 기록한 뒤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종별로는 토목은 4.7% 늘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축이 8.5%나 줄면서 건설기성 하락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건설수주(잠상)는 올해 들어 급격한 변동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25.5%(전년 동월 대비), 2월 -22.5%로 부달 연속 급락하다 3월 22.6%로 반등에 성공했다.

4월 건설수주는 11조 3200억원으로 전년 동월(7조 9300억원) 대비 23.8%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공종별로는 건축(15.9%)과 토목(7.9%)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발주자별로도 공공(9.7%)과 민간(29.6%)이 동반 상승했다.

통계청 측은 지난해 4월과 비교해 기저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4월 건설수주는 9조 1440억원으로 1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김보경 통계청 산업통합과정은 "주택의 경우 지난해 4월 재개발 수주가 줄었지만 올해 4월에는 늘었다"며 "토목도 지난해와 비교해 급격히 증가한 것은 기저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상반기 건설경기가 극심한 무진에 시달렸기 때문에 증가세를 보이는 듯하지만 장기적으로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한다. 즉 건설경기의 반등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주택부분으로 지난해 상반기 급격하게 위축됐다"며 "올해도 인허가 등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재현기자 ih@

社 說

내년 예산, 노후 SOC투자 대폭 늘려야

각 부처의 내년 예산요구액 접수가 지난주 마감됐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1조원가량 줄여서 편성되던 SOC 예산도 내년에는 20조원을 넘길 것이란 기대적인 전망이다. 확대를 받아오던 SOC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도로·철도 등 전통적 의미의 SOC 예산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24조원 규모의 여타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했다가 예산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적정성 검토와 사업규모 확정 등을 거쳐 내년에는 기껏해야 기본계획 수립이나 기본설계 예산 정도만 반영돼도 다행이다. 그렇다면 SOC 예산은 어디서 늘릴까.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생활밀착형 SOC △노후 SOC 안전투자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SOC 등을 3대 핵심 투자 패키지로 선정했다.

생활형 SOC 확충은 올해 예산에 8.7조원이 반영될 정도로 이 정부의 확실한 정책 방향으로 자

리 잡았다. 눈에 띄는 점은 노후 SOC 안전투자 개념이 예산편성 단계에 도입됐다는 것이다. 사실 생활형 SOC의 대표로 꼽히는 도서관 신축 등은 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건비 등 향후 시설을 유지하는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노후 SOC 투자 확대 방향이 매우 적절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인프라는 급속하게 노후화돼 전국에 잠재적 안전 사고가 내재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지자체 등 시설물 관리주체들은 재정부족으로 제때에 진단과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지관리도 건설 못지않게 중요하다. 마짐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관리기본법이 작년 말 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 시행에 따른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선은 전국의 인프라에 대한 전수조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부가 못했다면 국회 심의단계에서라도 추가해야 한다. 공공부문 인프라를 먼저 시행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조사도 공공 예산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민들은 자기가 매일 이용하는 다리의 안전 여부가 궁금하다. 노후 SOC 투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